

광매칼럼



박 상 원
기획실장

6·13 지방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자질

올해의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약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의회가 예전보다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참여가 저조한 대의정치와 한계, 기득권에 안주하며 기존 정치권의 구태 답습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의 무관심, 부패와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등 지방자치가 위협받고 있다. 노출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절박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20여년에 걸쳐 실시된 지방자치에서 드러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자치단체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15일 현재 지방선거(6월 13일)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후보로 나서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해 말부터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출품기념회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투표 120일 전에 실시되는 예비후보등록 이후부터다. 하지만 지역 선전 역할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줄이어 출마선언하면서 과열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있지만 허술한 정당체제와 운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하다.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지역발전과 성공적인 행정이 이뤄진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자질로 실덕력, 신뢰성, 추진력, 공정성을 꼽는다.

실덕력은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자치단체장의 포용력, 친화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뢰성은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 실령 당선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게 돼 주민들의 자금심 훼손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추진력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행력이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등 전문 행정 능력이다. 공정성은 청렴한 일처리를 의미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뇌물 수수가 끊이지 않았고 자질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돼 왔다. 연임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정성과 추진력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 현안은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도시 활성화, 에너지 벨리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5·18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미래청사진 제시, 광주 군 공항 이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이들 현안들이 민선 7기에는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돼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선 1기에서 6기까지 독점적 정당구조 속에서 후보의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일반적으로 후보 선택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 올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는 이들은 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여기에 정의롭고 당당한 광주정신, 원칙과 소신이라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에 일가견이 있으니 후보로 나섰겠지만 정말 ‘내가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해 봐야 한다.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은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 후보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최소한 청렴한지, 공정한지, 추진력은 가졌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현장칼럼



김 진 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장

규제혁신은 기업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변모되었다. 또한 과거의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민간인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믿지 못하고 일일이 지시하듯이 만들어 놓은 규제들도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신하자는 주장에 모든 경제주체들은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눈높이와 규제를 받는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눈높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이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주변사람이나 의사에게 아픈 부위나 증상을 알린다. 아픈 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치료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어 알려야만 치료가 시작된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기업경영상의 증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인 기업인이 직접 소리내어 나의 아픔을 주변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기업인 입장에서 마음껏 호소할 수 없는 점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규제를 집행하는 정부가 먼저 현장에

나가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작년 2월 초에 지방청장으로 와서 제 일 먼저 추진한 것이 지역중소기업 유관단체와 기업애로해소소를 위한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장방문이나 업종별 기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 것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함이었다.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들어보니 다양하였다. 창업, 입지, 부담금, 중복인증뿐만 아니라 점검이나 과태료가 나오기 전까지 알지 못하는 각종 신고의무 등 정부가 보기에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현장의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들게 된 기업의 목소리를 해당기관에 구체적인 제언으로 건의하면 수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건의된 규제완화 내용들을 공무원들은 고객인 중소기업인의 시각이 아닌 공급자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에서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한 규제건의는 총 12건이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을 회신받았다. 수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 기업입장에서는 손톱에 가시같이 소소하지만 불편함을 주었던 규정들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업체의 국내제품 구입이 강제되어 있는 절충교역 기업애로해소소를 우선한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을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토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신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대행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수 300인 미만으로 제한한 법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콘트론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소망이 있다. 먼저 기업인은 정부의 노력과 진정성을 믿고 그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개별기업의 목소리가 적다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몸이 아플때 소리내어 주변에게 알림으로써 병의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중소기업입부 광주·전남청에 호소한다면 기업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병의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독자 투고



평화의 상징, 평창동계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한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부모가 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88올림픽을 경험했던 모든 이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은 자명하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다. 참여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 바로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인류 화합과 평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북한이 대규모의 방문단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경찰은 90개국 이상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평창 올림픽의 모토를 ‘24시간 완벽 경비’로 정하고,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 ‘경찰청-제2차 치안대책위원회’를 갖고 대회 기간 선수촌과 모든 경기장에 충분한 경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6·13 경선룰 유능한 후보 선택에 방점 뒤야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의 후보 경선룰이 어떻게 마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어느 정당도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후보 경선방식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갖가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입지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데 후보간 합종연횡 등 연대 움직임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룰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에 앞서 전달한 경선방식은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 반영 원칙이 제시됐다. 하지만 세부적인 룰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여성, 청년, 정치신인 등에 대해 역대선거에서 부여했던 가산점(25%)을 뛰어넘는 과격적인 가산점을 주는 방안과 현역의원 등에게는 10~20% 감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탈당 전력자는 20% 감점하되 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무효화할 수 있고, 친인척·측근 비리 후보자와 음주운전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전해진다. 또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마 입지자들은 경쟁상대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 압력을 가할 공산이 크다. 또한 경쟁상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7대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당규에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기초단체장 이하는 원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략공천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어느 단계까지 전략공천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각 정당의 후보공천 룰은 선거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필승카드를 선별하는 잣대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절차적 통과의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 당은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공천 룰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남 농촌관광 활성화 ‘스토리텔링’이 답이다

전남도가 올 한 해 농촌관광객 110만 명 유치, 농외소득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관광 활성화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는 88만 명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다녀갔으며, 이로 인해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관광객 기준 25% 증가한 목표치이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방문의 해’여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춰 전남관광을 홍보하는 준비와 마케팅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계절·테마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편의시설 개보수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양과 체험, 자연 속 자유를 원하는 도시민들이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의 아름다움과 고향의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억6천만 원을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노후 시설 개보수와 편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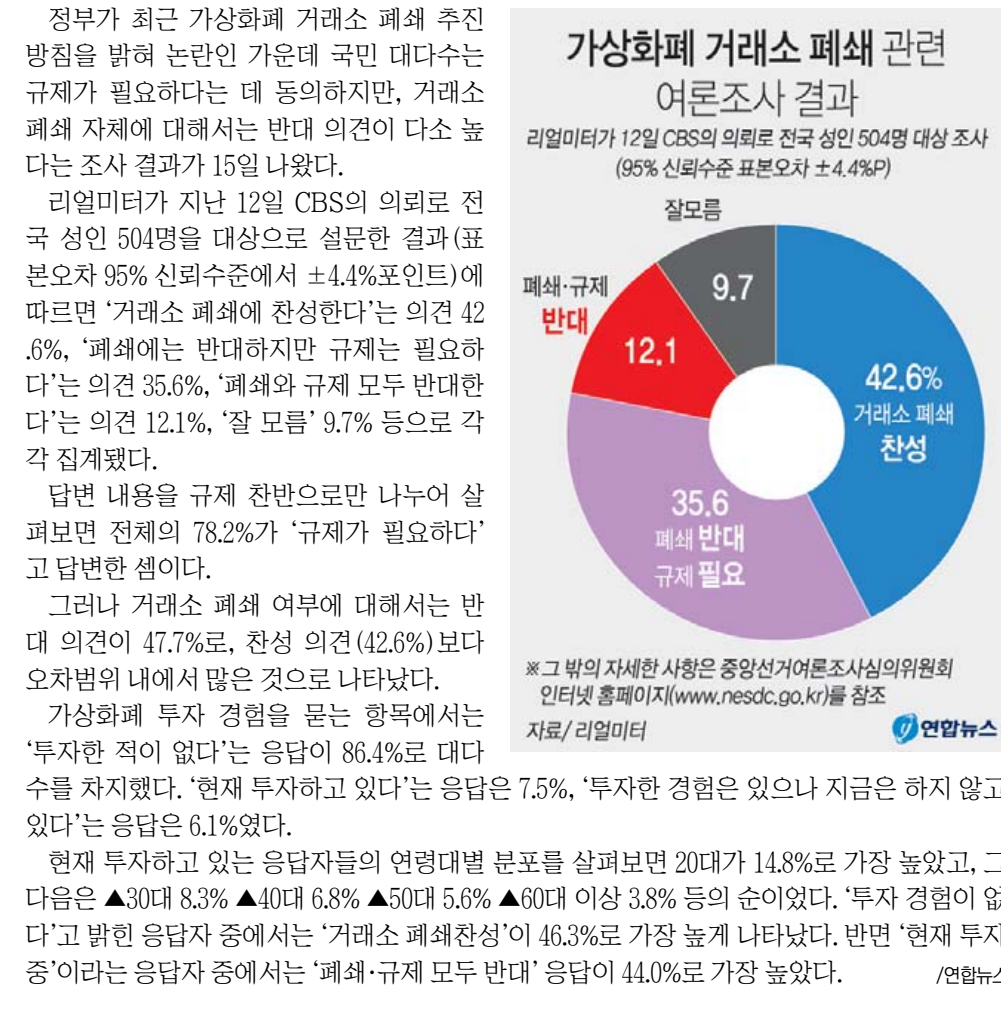
설 확충 등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3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체험 및 숙박시설, 식당 등 시설을 활용해 마을을 찾는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호응을 얻었다. 한 해 동안 ▲한우 집목 요리개발, 장류 음식개발, 주민강사양성 등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초청 체험, 사계절 드론 촬영 동영상제작, 편의시설점검, 시설 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보수 확충 등을 지원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전남 농촌관광 활성화에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온천과 마을살화를 중심으로 일타일곡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우리도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발굴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래픽 뉴스

국민 78.2% ‘가상화폐 규제 필요’...거래소 폐쇄엔 47.7%가 반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 의 650-2099
	정기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설실 650-2006	기획사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